

한우 가격 폭락 지속...전남도 전방위 대응 나선다

연중 소비 촉진계획 추진

지역축제 연계·할인 행사

남도장터 등 온라인 활용

전남도가 사육 규모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우고기 소비촉진 계획’을 세우고 전방

위적 대응에 들어간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한우산업 안정대책을 마련, 농가의 흥수출하 자제, 농축협장·유통업체·관계기관 간담회, 학교·기업 단체급식 한우고기 사용 확대 협조 등 도 차원의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대대적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 농축협 할인행사, 지역축제·한우축제 연계, 남도장터 등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농·축협 판매장을 통해 전국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고기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연중 실시한다.

또 오는 10일 광양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해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는 4월 영암왕인문화축제, 5월 함평나비축제, 보성세계차엑스포, 10월 함평국향대전·강진갈대축제·2023 국제농업박람회까지 연중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 한우자조금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한우대축제, 한우 먹는 날 등 관련 행사를 당초 계획(하반기)보다 앞당겨 5월 가정의 달에 개최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축산물 판매업체 70곳이 참여하는 남도장터 기획전 및 특판행사도 운영한다.

이밖에 각 시군에서도 한우고기 소비 촉진 관계기관 협의회를 사전에 개최하도록 추진계획을 알리고 세부 실천 방안을 협의해 지역 농·축협 및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와 협조해 대대적 소비 촉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

근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한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범국민적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당부드린다”며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사육농가에 서는 자발적 압소감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월 15일 한우고기 소비 촉진 대책 마련을 위해 시군, 농·축협, 한우 광역브랜드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 예술영재 120명 선발...재능계발 지원

21일까지 참여 청소년 모집

9개월간 맞춤형 전문 교육

전남도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술 영재 120명을 선발해 재능계발을 적극 지원한다.

전남도는 7일 “음악·미술·무용 등 예술에 재능 있는 ‘예술영재 키움’ 참여 청소년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영재 키움’은 예술 꿈나무에게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내 예술 전문고등학교인 무안 소재 전남예술고와 광양 소재 한국창의예술고의 인적·물적 기반시설을 활용해 4월부터 9개월간 전문 교육을

진행한다.

지원 자격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최근 2년간 대회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재학 중인 학교 교사 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기타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바라는 청소년은 (재)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43)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서류 심사→실기→면

접 평가로 이뤄진다. 선발된 영재는 4월부터 9개월간 매주 토요일 희망하는 학교에서 교사나 전공 실기 지도 강사에게 1대1 또는 소규모 교육을 받게 된다.

방학 기간 연주회·전시회 관람 등 현장체험 학습을 하고 분야별 유명 예술인 초청강연 등을 통해 예술 영재가 꿈을 실현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는 기회와 장을 제공한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예술에 재능 있는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 예술 영재 키움 사업을 통해 도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예술 영재가 꿈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블루카본 활용을 통한 전남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3 전남도-전라북도의회 공동 심포지엄이 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남도 제공

“블루카본 조성·관리 탄소중립 선도해야”

전남도·의회, 심포지엄 개최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해양생태계에서 흡수되는 탄소인 블루카본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탄소중립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 2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심포지엄에 관련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탄소 흡수원 습지와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주제발표 1·2와 지정토론 순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권봉오 군산대 교수는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 조성·신규 블루카본 자원 발굴”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전남이 보유한 블루카본 자원과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블루카본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선 김종일 전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영균 전남도의원, 김태훈 전남대학교 교수, 신우석 제주연구원 박사, 최임호 한국수산자원공단 과장, 김용덕 전남도갯벌보

행민 심포지엄에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권봉오 군산대 교수는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 조성·신규 블루카본 자원 발굴”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김동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전남이 보유한 블루카본 자원과 잠재력을 설명하면서 블루카본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선 김종일 전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영균 전남도의원, 김태훈 전남대학교 교수, 신우석 제주연구원 박사, 최임호 한국수산자원공단 과장, 김용덕 전남도갯벌보

전관리추진단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전남형 블루카본 정책과 사업 발굴’, ‘역간척 사업 등 갯벌의 복원’, ‘블루카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남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다.

최선국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장은 “전남도가 탄소 흡수원으로 블루카본을 잘 조성하고 관리한다면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다”며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과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개발공사, ‘무늬만 지역업체’ 퇴출

지역제한 현장확인제 시행

투명 계약행정...공정성 확립

전남개발공사가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려 서류상으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에 둔 ‘무늬만 지역 업체’를 가리기 위해 계약체결 전 현장 확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7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은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일반용역·물품은 3억 3,000만원 미만까지 지역제한 입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해 평균 30건의 지역제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입찰 참여업체의 전남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로만 확인했다.

그러나 타지역업체가 서류상으로는 전남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지역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공사는 수주기회를 얻지 못하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계약단계부터 현장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확인제도는 입찰공고부터 안내가 이뤄지며, 개찰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을 위한 사무 공간, 최소한의 사무설비, 직원 상주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지역 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

격심사 부적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사는 또 계약체결 전 적격심사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심사서류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계약행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업체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 시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현장 확인제도를 통해 무늬만 지역 업체의 입찰참가를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지역 업체의 보호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만의 ‘체류형 관광지’ 개발·육성

공공주도 기본구상 용역 추진

광주시가 자치구와 함께 공공 주도로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한다.

광주시는 7일 “신활력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광주만의 테마 관광지를 지정·육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전국 225개소가 관광지로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광주는 전무하다.

용역에서는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여건 분석, 테마 설정, 타당성 조사 등 과업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광주시는 우수한 자연경관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자연경관과 연계해 체류형 명품 특화 관광지를 발굴, 도시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새로운 관광지는 민간 또는 공공이 함께 개발하는 관광단지나 달리 공공 주도만의 개발로, 광주시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개발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여건 분석, 콘셉트 구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본구상을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광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자치구 뿐 아니라 인접 시군 등과 협업을 통해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구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길용현 기자

‘함께 육아’ 캠페인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JeollaNamdo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